

인구감소시대,
지방도시의 생존을 말하다

인구감소시대, 지방도시의 생존을 말하다

발 행 | 2022년 11월 09일

저 자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건축공간연구원

펴낸이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건축공간연구원

펴낸곳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82동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전 화 | 02-880-5641

기 관 | <https://gses.snu.ac.kr/>
<https://www.auri.re.kr/>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건축공간연구원 2022

본 책은 저작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인구감소시대, 지방도시의 생존을 말하다

2022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건축공간연구원 공동심포지움

목 차

❖ 인사말	7
-------------	---

1. 기 조 강 연 자 료	11
----------------------	----

지방도시 및 인구문제의 당위와 현실

- ◆ 전 상 인 (서울대학교 교수)

2. 발 표 자 료	23
------------------	----

성장과 쇠퇴로 본 한국 도시 트렌드

- ◆ 김 세 훈 (서울대학교 교수)

인구감소시대 지방도시 생존전략: 정주인구에서 관계인구까지

- ◆ 장 민 영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미래 농촌공간이 사는 법: 농촌다움의 보전과 창조

- ◆ 손 용 훈 (서울대학교 교수)

3. 토 론 자 료	51
------------------	----

- ◆ 홍 석 영 (농촌진흥청 과장)
- ◆ 김 태 형 (서울대학교 교수)
- ◆ 윤 주 선 (충남대학교 교수)
- ◆ 안 재 락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 ◆ 고 광 본 (서울경제 선임기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조 경 진

우리 모두 아직은 이태원 참사의 아픔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참사의 원인은 치안과 공공 안전 등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는 본래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이번 경우는 도시 생활과 공간이 지닌 가장 취약한 측면이 드러난 예일 것입니다. 이제 대도시와 밀도에 관한 근원적인 성찰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과잉과 과밀의 메트로폴리스가 여전히 적합한 거주 환경인가에 대한 숙고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 사는 방식의 생태적인 전환이 요구되는 때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지방도시가 어떻게 지속 성장할 수 있을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국토는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으로 집중이 두드러집니다. 일부 대도시로 산업과 문화 등이 쏠리면서 중소도시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쇠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절벽에 처한 상황에서 지방도시의 장래가 그리 밝지 않습니다. 다행히 최근 긍정적인 변화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애착을 두고 정착해서 사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기반으로 상품화하여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지역 유무형의 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면서 지속 가능한 삶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목 경제 규모로 적정한 규모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기에 지방도시의 지속가능성에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팬데믹 이후 관광 패턴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넓게 보기보다 깊게 경험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중소도시에서 한달 살기도 새로운 문화로 확산되고 있고, 대도시 생활을 접고 소도시에 정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로컬에서 창의적 살기는 지역과 주변 맥락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나아가 자연과 문화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생태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시에 사는 것이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인구감소시대, 지방도시의 생존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엽니다. 건축공간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발제와 토론해주시는 여러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생산적인 논의를 통하여 의미 있는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심포지엄 기획준비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과 참여해주신 청중분들께도 감사 인사 올립니다.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이 명 범

전 인류의 56%가 도시에서 거주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92%가 도시민입니다. “도시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하버드대학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의 말처럼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할 것만 같았던 우리나라 도시의 발전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해 정체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방도시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과 몇몇 대도시로 인구가 흡수되면서 많은 지방도시들이 ‘소멸’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방도시 소멸 문제는 만병통치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태도도 지양해야 합니다. ‘지방도시 거주민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라는 대전제 아래 지방도시가 처한 제각각의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그것에 맞춘 처방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지혜와 집단지성이 필요한 시점에 오늘 공동심포지엄은 매우 뜻깊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 분야 연구기관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건축공간연구원의 전문가들이 인구감소시대 지방도시를 둘러싼 문제를 규명하고 대안을 논의합니다. 발제와 토론을 통해 풀릴 것 같지 않은 지방도시 문제 해결의 단서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소중한 자리를 기획해주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관계자분들과 심포지엄의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 조 강 연 자 료

전상인 (서울대학교 교수)

지방도시 및 인구문제의 당위와 현실

소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성명 전 상인

패러다임 전환의 모색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가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된 지 20년도 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성과는 미미한 편이다. 현재의 방법과 방향으로 가일층 분발해야 할지, 아니면 한 번쯤 발상을 바꾸어 원점에서 새로운 출발을 모색할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한다. 혹시 우리는 인구감소나 지방소멸에 관련하여 당위적인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곧 국가적 대재앙이라는 전제하에 출산율은 무조건 반등해야 하고 지방은 반드시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너무나 거룩한 담론 속에 상투적 정책만 되풀이되는 가운데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고 예산은 예산대로 흘러보내는 느낌이다.¹⁾

관행적 사고로는 돌파의 계기를 찾기 어렵다. 지금 한국사회는 토마스 쿤(Thomas Kuhn)이 말한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 절실히 요구한다. 그동안은 해당 부처 차원의 ‘정책’이 무성했다면 이제는 국가 전체 차원의 ‘전략’을 생각할 때다. 이는 인구 및 지역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대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성적 후퇴전’ 혹은 ‘연착륙’ 전략을 의미한다(우치다 다쓰루, “문명사적 규모의 문

1) 윤석열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지역균형을 위해 대기업, 명문대, 특목고를 세트로 묶어 지방으로 내려보낼 계획이라 말했다.

제에 직면한 미래예측,” 〈인구감소는 위험하다는 착각〉). 이때 필요한 것은 “감정을 배제한 냉철하고 계량적인 지성”이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상상력이자 결코 시간이 아니다(조영태, 〈인구, 미래, 공존〉). ‘화복동문’(禍福同門)이라 했듯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은 같은 문으로 들어오고 같은 문으로 나가는 법이다.

역대 인구·지방정책의 성적표

2006년에 2.1조 원으로 출발한 정부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13년에 14.4조 원이 되었고 2021년에는 46.7조 원까지 치솟았다. 물론 중앙정부 재정투입 이외에 유관 각종 지자체 예산까지 포함하면 이를 훨씬 더 상회한다. 또한 지금까지 실로 다양한 출산장려책이 시도되었다. 그럼에도 합계출산율은 1970년에 4.5명이었다가 2021년에 0.81명까지 급감하여 OECD 최저수준이다(세계 평균 2.32). 2021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은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이 나타났고, 인구증가율은 -0.2%로서 인구감소 국면에 돌입했다. 2022년 현재 5200만 명인 국내인구는 2070년에 3800만 명이 될 전망이다.

지방화에 관련해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 지방 이전 재원은 1985년부터 2020년 사이에 50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역균형 정책이 본격화된 2020년에 35.8조 원이었던 지방이전 재원은 2020년에는 177.2조 원이 되었다. 지방가용재원 역시 현재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총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는 1975년에 65.75%였다가 2020년에는 75.12%로 치솟았다. 명목 GDP 대비 수도권 GRDP의 경우, 1985년에는 43.72%였다가 2020년에는 52.73%로 늘어났다. 그 외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문화와 보건, 보육 등에 걸쳐 벌어져 있는 삶의 질 격차는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다.

이와 같은 인구 및 지방정책 성적표를 놓고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있는 듯하다. 정부 및 관변 학자들은 이처럼 막대한 재정투입이 있었기에 ‘그나마 선방’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더라면 인구감소는 더 심해졌을 것이고 지역소멸은 더 빨라졌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 반대는 기존 정책의 ‘참담한 실패’를 지적하는 쪽이다. 고비용·저효율 정책의 전형이라는 의미다. 어느 쪽이 옳은 판단일까? 전자는 일종의 ‘인디언 기우제’ 이론으로서, 같은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다 보면 그 언젠가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다. 이에 반해 후자는 선한 정책의 ‘비의도적 결과’(unintended outcomes) 혹은 ‘정책의 배신’(윤희숙, <정책의 배신>)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²⁾

인구·지방문제의 재인식: 1) 지방의 재인식

‘지방’은 천부적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이고,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국토공간이 수도(권)과 지방으로 이분화된 것은 근대국가 성립 이후의 일이다. 봉건제가 전통인 유럽의 경우 수도 자체가 최근에 탄생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의 경우에도 사실은 수도가 아닌 왕도(王都)였다. 공간의 불균형 문제가 제기된 것은 중앙집권적 근대국가 체제가 등장하고 정부주도 경제계획과 산업정책이 일반화되면서부터다. 그런 만큼 지역차별이나 지역균형에 관련하여 보편적이거나 절대적인 기준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다.

지방과 중앙의 공간적 구분 또한 급속히 악화되는 추세다. 사통팔달의 초고속교통망은 국토공간의 획기적으로 수축시켰고, 이는 사회의 전반적인 ‘모빌리티 전환’(mobility turn)과 연계되고 있다(존 어리, <모빌리티>). 계

2) 이를 뒷받침하는 키워드로 ‘남방한계선,’ ‘수도권 광역화 혹은 제2 수도권,’ ‘오송-세종 17Km’ 등이 있다.

다가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 시대의 개막은 온 세상을 공간적 거리와 상관없는 상시접속사회(all-connected society)로 변모시키고 있다(자크 아탈리,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 브라이언 첸, 〈올웨이즈 온〉). 우리나라도 이미 공간적으로는 사실상 단일 도시국가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강국을 자부한다.

이런 마당에 지방의 비(非)장소화는 싫든 좋든 대세다. 언어나 음식 등 일상생활에 있어서 지방색(地方色)은 급속히 떨어져 지역 특유의 아우라가 사라지고 있으며,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국토경관 또한 전국적으로 획일화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풍경이 국경’인 시대는 아니다(마르틴 바른케, 〈정치적 풍경〉). 경관의 차이로 지방이 구분되던 시대가 끝나간다는 말이다. 태어나 자란 곳을 떠난 이들이 ‘고향의 상실’을 경험한다면, 그곳에 계속 남아 있는 이들도 사실상 ‘제자리 실향민’의 처지가 되어가는 게 현실이다(김시덕, 〈대서울의 길〉).

인구·지방문제의 재인식: 2) 인구의 재인식

지방과 마찬가지로 인구문제 역시 생물학적 내지 자연적 현상만은 아니다. 근대적 통치와 더불어 인구는 정치적으로 ‘발명’되었다(미셸 푸코, 〈안전, 영토, 인구〉). 군사·약탈국가에서 경제·민생국가로 통치의 방점이 바뀌면서 출생과 사망 및 인구이동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인구에 대한 문제적 시각은 많은 경우 영토상의 각종 ‘경계’를 상정할 때 발생한다. 세계인구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감소추세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세계인구 자체는 계속 증가하여 2070년이면 103억 명에 이를 전망이다기 때문이다.

오늘날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해진 지리적 경계는 근대 민족국가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상의 공동체’(imagined

기조강연

community)에 가깝다(베네딕트 앤더슨, 〈상상의 공동체〉).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무릇 인간이 어떤 국가의 국민으로 호명되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국민국가 체제하 지역간 경계 역시 태생적으로 신성 불가침은 아니다. 요컨대 지금 우리가 아는 지도는 세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영토적 통제를 구성해 온 권력의 도구’라 볼 수도 있다(설혜심, 〈지도 만드는 사람〉).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따라서 인구개념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면서 적은 인구로 사는 지혜를 공간문제와 더불어 고민하는 일이다. 우선 국가적 인구감소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계적으로 집착하기보다는 인구밀집의 사회적 효과를 인정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인구나 산업이 집중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 실현이라는 차원에서는 국가적 이익이라는 점을 이해하자는 주장이다(제프리 웨스트, 〈스케일〉). 국부(國富)의 원천은 역시 대도시다(제인 제이콥스, 〈도시와 국가의 부〉),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또 다른 전략은 인구의 공간적 유동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온 ‘정주(定住)인구’(resident/sedentary population) 개념은 점차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변해간다. 특정 인구조사 시점에서의 주민등록에 기반한 지역 상주인구는 디지털 및 모빌리티 시대에 큰 의미가 없다. 최근 새로운 인구개념이 대안으로 속속 부상하는 것은 따라서 놀라운 일이 아니다. 가령 ‘생활인구’(de facto population)는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필요한 조사 시점에 개인이 위치한 지역을 기반으로 집계된 ‘현주(現住) 인구’를 말한다.³⁾ ‘관계인구’(related/engaged population)란 각종 사회적 관계맺기를 통해 창출된

3) 비주민 근로자, 유학생, 한달살이, 장기 관광객, 등록 외국인 등으로 주민인구 개념을 확대. 최근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생활인구’ 개념 본격적으로 도입. 부산시 역시 축소사회 개념을 도입하면서 제1차 부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반영.

‘제3의 인구’를 말한다(우찌다 다쓰루, <인구감소는 위험하다는 착각>)4).

인구감소 시대, 지방이 사는 길: 1) 정치권 배제

인구감소 시대에 지방이 사는 법은 무엇보다 지역균형이나 지방자치의 당위성이 아닌 진정성을 고민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누구를 위한 지역균형인지를 묻고 무엇을 위한 지방자치인지를 따지자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거룩한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정치시장의 과잉 특수(特需) 및 행정 낭비를 수반하는 경향이 있다.5) 지역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역균형을 명분으로 도지사를 위한 도, 시장을 위한 시, 군수를 위한 군, 국회의원을 위한 지역구가 존재하는 듯한 작금의 현실은 마차가 말을 끌고 꼬리가 개를 흔드는 격이다. 지역의 정치적 ‘자리’ 지키기를 위해, 그리고 공무원 ‘밥그릇’ 늘이기를 위해, 언젠가는 지역 인구 ‘할당제’ 이야기까지 나올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민이란 과연 주체적 ‘인구’로 존재하는지, 정치적 ‘인질’(人質)로 존재하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논리와 정파적 산법(算法)이 난무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실에 관련하여 이른바 유관 공간 ‘전문가’ 집단의 책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도시계획, 설계, 건설, 건축, 조경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의도적이든, 결과적이든 ‘그들만의 지방정치’를 위한 동업자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무관하게, 또한 해당 지방 특유의 장소

4) 일본에서 제2기 지방창생전략(2020~2024년)의 하나로 도입. 단기‘체류’, ‘정기’방문, 자원봉사, 고향납세 등이 주요 근거. ‘제2의 주민’ 자격으로 도시계획 동참하기도 함. 국내에서는 춘천의 ‘백만 글로벌 관계인구’나 전라남도의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가 이에 해당.

5) 현재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17개. 고려시대는 오도양계제(五道兩界制)였고 조선은 팔도(八道) 체제. 최근에도 경기북도, DMZ 평화통일특별도 추진 중. 기초자치단체 역시 계속 분화 중. 한편, 2022년 8대 지방선거 입후보자는 총 7,531명(자치단체장 243, 지방의원 3860)으로서, 실제 출마 준비자를 포함하면 1만명은 확실히 능가할 듯.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중앙정치에 예측됨. 출마자의 36%가 전과자일 정도로 정치당인 많음. 인구감소에도 불구, 지방공무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문재인 정부하에서 30만 명 돌파. 특히 이른바 정무직 ‘어공’ 급증. 최근 8년간 서울시 25개 구청 전체 공무원이 20% 증가하는 동안 임기제 공무원은 46% 증가.

기조강연

성과 상관없이 오늘날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개발사업이 전반적으로 거대해지고 과도해지고 또한 몰개성· 획일화되는 경향은 선출직 정치인과 관련 전문가 사이의 공모 결과일 개연성이 높다. 정치인들의 “득표장치가 장기적으로 계속 가능하려면 건축공사를 끊임없이 발주해야” 하기 때문이며 이럴 경우 이른바 ‘착한 건축’은 설 땅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구마 겐고(隈研吾), “건축이 도시와 지방을 살릴 수 있다,” <인구감소는 위험하다는 착각>). 결국, 진정한 지역균형과 지방자치가 구현되려면 지방의 공간 경계가 권력주도가 아닌 주민위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인구감소 시대, 지방이 사는 길: 2) 다양성 경쟁

지방자치의 원래 취지는 각 지방의 다양성에 기반하여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가 오히려 지방의 전국적 평준화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말하자면 차별성 경쟁이 아니라 유사성 경쟁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지역균형을 할당과 안배, ‘1/n주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모든 지역에 지방공항이 필요하고, 모든 지역이 종합대학을 가져야 하며, 모든 지역에 KTX가 지나가야 할 뿐 아니라 심지어 국립공원조차 전국이 골고루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발상이다.⁶⁾ ‘메가시티’ 얘기가 나오면 모든 지역이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특별자치도(特別自治道) 말만 나오면 모든 지역이 특별자치도를 꿈꾸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⁷⁾

우리나라 지자체들은 서로서로 다투는 꼴이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말하지 않는 곳도 없고, 친환경도시나 문화도시, 역사도시, 복지도시를 표방하지

6) 현재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22개로 증가(미국 59개, 일본 32개). 지방공항은 현재 15곳 거의 대부분 만성적자인 가운데 5-6개 추가 건설 중.

7) 메가시티의 지역별 안배에 따라 메가시티 본래의 취지 저하. 제주도, 세종시 이어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통과(2022.6)

않는 곳도 없다. 이처럼 동일한 가치를 일제히 지향하는 결과는 상호간 정책 베끼기와 흉내 내기다. 전국의 모든 도정(道政)과 시정(市政)은 일종의 ‘미니국정’이다. 중앙정부가 하는 일을 지방 차원에서 다시 반복한다는 의미에서다. 우리나라에서 지방 나름의 독창적인 장기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일은 원천적으로 어렵다. 지방정부가 수시로 바뀌는 제도 및 문화 탓이다. 지자체 간 다양성과 차별성의 부재는 무엇보다 지방자치의 미덕이자 보람인 ‘발로 뛰는 투표’(voting with the foot)를 무색하게 만든다(“티부 가설”). 소비자들이 볼 때는 똑같은 상품을 파는 상점이 숫자만 많을 뿐이다. 지금 처럼 양적 잣대에 의한 기계적 지역균형 맞추기는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공산이 높다. 각 지자체마다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질적으로 서로 달라야 하고, 그런 만큼 지역발전 전략도 획기적으로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⁸⁾

인구감소 시대, 지방이 사는 길: 3) 세계화 + 지방화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균형 정책은 다분히 국경선 내부에서의 제로섬(zero-sum) 게임에 가깝다. 말하자면 주어진 인구 혹은 파이를 놓고 서로 뺏거나 뺏기거나 하는 식의, 다시 말해 한쪽 지자체의 이득이 다른 지자체의 손해로 귀결되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지방화의 본래 의미는 ‘국경 없는 세계화’에 있다. 오랜 봉건제의 경험을 갖고 있는 지역분권의 본고장 유럽은 “모든 사람을 남으로 볼 때 온 세계가 고향이 된다”고 믿는다(아베 긴야, <중세를 여행하는 사람들>). 지역의 발전을 국민국가 경계 내에 가두지 않을 때 지역 상호간의 비(非)제로섬(non-zero-sum) 게임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부나 국력의 크기도 늘어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이 세계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세계화와 지방화는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다. 세계화 시

8) 최근 부산시는 ‘영어상용도시’ 추진계획을 밝혔는데, 한글학회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기조강연

대를 맞이하여 “점점 더 지역공동체들이 경제적 성공의 비결이 되고 있다” (리처드 플로리다,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이는 지방 하나하나가 국민국가의 매개 없이 세계와 직통하고 직거래하는 국가대표 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송병락, “한국의 대표지역을 육성하자”). 21세기 ‘거리의 종말’과 ‘평평한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번영하는 길 역시 다양한 지역들이 ‘거대한 상이(相異) 공동체’가 되는 방법밖에 없다(엔리코 모레티, <직업의 지리학>). 역사적으로 이는 완전히 새로운 발상도 아니다. 삼국시대까지만 해도 한반도 거주민들은 대체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발표자료

김세훈(서울대학교 교수)

장민영(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손용훈(서울대학교 교수)

성장과 쇠퇴로 본 한국 도시 트렌드

소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성명 김 세훈

한국은 과거 경제성장과 근대화를 추구하며 합리적인 계획을 통해 다수의 도시를 만들어낸 나라다. 오늘날에도 활발하게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도시 강국이요, 한국 국민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도시 내 역세권·숲세권 가까이에 살며 자녀 교육에 헌신하는 열혈 도시민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를 둘러싼 분위기는 녹록지 않다. 특히 인구 측면이 그렇다. 작년 우리나라 인구는 전년 대비 9만 1천 명 감소했다. 72년 만에 처음 인구가 줄어들며 그야말로 인구절벽에 다다랐다. 그에 반해 고령인구는 지난 15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내후년을 기점으로 고령인구 1,000만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인구감소, 저성장, 각자도생 기조에서 한국의 지방도시는 다양한 미래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본 원고는 불투명한 전망 속에서도 지방도시의 미래에 의미있는 도시·사회변화가 무엇인지 탐구하고자 한다. 여러 변화 중 비교적 최근 등장한 현상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그렇다고 여기서 정리한 현상을 지방도시를 살리는 묘약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변화의 씨앗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공공과 민간, 시민이 함께 정성을 기울이고 군불을 때주어야 한다. 여기서는 한국 도시가 ①인구와 일자리의 비대칭, ②도시 라이프스타일

유연화, ③빅데이터·AI 기술 잠재력 등으로 향후 다양한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첫째, 인구와 일자리의 비대칭이란 한 지역에서 거주인구가 줄어도 도시 성장이 지속할 수 있는 측면을 말한다. 여기서 성장은 경제활동과 일자리 증가, 골목상권 활성화, 삶의 질 개선 등 여러 지표로 말할 수 있다. 물론 인구는 도시의 평균적인 수요 수준과 생산성을 반영하는 기초 지표이다. 하지만 국내 여러 지역에서 출산 저하와 인구 유출로 ‘거주인구’라는 파이는 줄었지만 그로 인한 인구 공백이 해당 도시의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거나 때로는 잠재적 도약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과거 농업중심 사회나 근대 산업도시에서 인구는 곧 노동력이다. 한 도시의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농경과 제조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노동자와 가족이 유입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구 증가는 도시와 마을이 성장하는데 필수 조건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생산과 소비의 무게중심이 지식기반산업과 플랫폼 경제로 이동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의 관계는 과거보다 훨씬 느슨해졌다. 어느 때보다 풍부하게 유동하고 있는 지식, 자본, 사람들의 관심만 끌 수 있으면 도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거주 인구 증가를 기반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한 예로 지난 5년간(2014-19)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인구가 감소했음에도 일자리가 증가한 도시는 무려 154개에 이른다.⁹⁾ 전체 시·군·구 중 67%다. 지방도시 중 군산시, 창원시, 삼척시, 평창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삼척시의 경우 지난 10년간 9천 명 이상의 인구가 줄어 현재 63,000여 명 수준이다. 하지만 삼척시가 인구소멸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

9) Kim, Young Eun, Lee, Jae Seung & Kim, Saehoon. 2022. "Proposing the classification matrix for growing and shrinking cities: A case study of 228 districts in South Korea." *Habitat International*, 127: 102644.

다. 코로나 이전 삼척시의 월평균 유동인구는 37만 명 수준이며, 삼척시 내 해수욕장, 어촌체험마을, 갈남항 공유주방 ‘비밀키친’ 등이 있는 근덕면의 경우 8월 방문객이 50만 명에 육박한다. 이들 중 일부는 단순 삼척 여행자가 아니다. 다양한 형태의 살롱, 스테이, 문화크리에이터로 삼척시와 관계를 맺고 있다. 물론 과도한 관광화에 따른 지역성 훼손의 우려는 있지만, 앞으로 지역에 산재한 폐교와 원전해제부지의 창조적 활용, 포항~삼척을 잇는 동해선 개통(‘24년 예정)을 계기로 삼척은 다양한 변화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도시에서 인구가 감소하면 자연스레 드러나는 순기능도 있다. 부동산 수요가 줄어 가격이 하락하고 저렴주택·점포 확보가 용이해진다. 나이가 낮은 밀도가 주는 한적함의 감각과 교통체증 감소 효과도 있고, 로컬에 진짜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 본연의 멋을 재발견하기도 한다. 만약 적정 입지의 유희자산을 잘 이용해 교육기회를 증진하고 로컬 고유의 일자리와 골목 상권을 만들면 지방도시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한다.

경남 내륙지역의 거창군이 그 좋은 예다. 도내 군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이지만 1970년대 초반 12만 명에서 올해 초 6만 명 전후로 거창의 인구는 반토막났다. 원래 주 산업은 연 매출 1,500억 원의 사과농사였다. 하지만 해외농산물 경쟁과 농업인력 확보 어려움으로 거창의 경제활력은 침체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기회가 찾아왔다. 폐교 위기에 있던 한국폴리텍대학 거창캠퍼스가 거창군에 무상 이양되었고 해당 학교를 리모델링 한 자리에 2010년 한국승강기대학교가 신입생을 받기 시작했다. 국내 최초의 승강기 전문인 양성기관으로 자리잡은 승강기대학은 입학정원 297명 수준으로 재학생 전원 생활관 입실이 가능하다. 최근 거창승강기밸리 조성을 통해 37개 기업과 승강기안전기술원을 유치했다. 이를 통해 승강기 설치·유지 보수·기술개발 관련 연 매출 2,000억 원 이상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저창의 주 산업이 사과에서 승강기로 바뀐 순간이다.

둘째, 최근 학습, 업무, 소비, 여가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이 유연화되고 있다. 우리는 전통적 가치관과 위계질서의 해체, 주어진 조직에 대한 소속감 상실을 겪고 있다. 물론 사회가 유대감을 나누지 않는 개인으로 쪼개져 사는 세태는 우려할만하지만,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개인이 스스로 세운 가치에 따라 능동적인 삶을 경영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런 변화 가운데 한국의 경제·소비활동 주체로 MZ세대가 부상했다. 이들은 하나의 지역/회사/공동체의 속박에서 벗어나 SNS를 기반으로 관심사를 공유하고 나만의 행복과 성장 방식을 추구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유연근무제·비대면교육 시행, 플랫폼을 통한 소비·교류 보편화도 많은 사람의 라이프스타일 유연화로 이어졌다.

그중 하나로 유연근무 확산을 들 수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 중 '20년에 14.2%가, '21년에 16.8%가 유연근무를 했다. 국내 100대 기업 중 코로나19 기간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90%에 육박한다. 아마도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유연하게 일하기의 매력과 워라벨에 대한 만족도는 식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수요에 발맞추어 우수한 인재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도 관련 제도와 관리·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유연근무의 확산은 서울·수도권 중심의 젊고 소비력 있는 근로자의 활동영역을 지방도시로 넓히는 계기가 된다. 최근 테크, 플랫폼, 패션·디자인 기업을 중심으로 주2-3일 출근 혹은 전면 원격근무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무실에 나와 일하는 시간 이외에 나머지 시간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선택하여 일하게 된 것이다. 소득수준이 높고 문화·소비취향이 까다로운 근로자와 그 가족들은 집 근처를 벗어나 매력적인 지방도시에서 과거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이는 휴일과 주말을 활용한 소비형 관광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부상하는 업무방식 중 하나가 ‘워케이션(Work+Vacation)’이다. 숲속 계곡에 발을 담근 채 화상회의를 하고 휴양지에서 별을 세며 맥주 한 잔과 함께 프로젝트 기획을 주도한다. 휴양지, 외판점, 비도시지역의 숙박형 공유오피스 등 편한 장소를 골라 회사와 합의된 적정량의 업무를 소화하고 남은 시간에는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킨다. 국내 다양한 기업과 스타트업이 워케이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야놀자의 동해·여수 워케이션 지원, CJ ENM의 제주 워케이션 실험, 한국관광공사의 워케이션 체험단 모집, 테스커의 양양 워케이션 캠페인, 오-피스 조천·사계점의 공유오피스·숙박·체력단련실 운영과 코사이어티빌리지 제주의 요가·필라테스·명상프로그램 등이 그 예다.

셋째, 빅데이터 기반 AI 기술은 지방도시에서의 삶의 질을 운택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인구밀도가 낮고 행정투입 재원과 사회인프라가 부족한 지방도시에서는 시민이 원하는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공공행정의 예산·인력 부족도 문제지만, 민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수요가 터무니없이 부족해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빈자리를 다양한 AI 기술과 플랫폼 서비스가 보완하기 시작했다.

과거 산업혁명을 통해 인류의 육체노동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면, 21세기 AI 기술은 지능기반 서비스와 감정노동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다. 앞으로의 AI는 단순 이미지 인식과 빅데이터 분석에서 한발 나아가 글과 그림을 창작하고, 사람과 정서적 공감을 함으로써 사람보다 더 사람을 잘 읽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¹⁰⁾ 한 예로 네이버에서는 2020년 3월 성남시에서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이는 코로나19 능동감시 대상 분들이 병원에 직접 가거나 보건인력과 대면 상담을 하지 않아도 호흡

10) 성낙호 네이버 클로바 책임리더 강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2022년 5월)

기와 발열 증세를 하루 2번 AI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는 서비스이다. AI가 전화를 걸어 증상을 확인하고 이 결과를 보건소에 알린다. 이를 통해 성남시에서는 대규모 행정·보건인력의 투입 없이도 유증상자 2,000여 명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 최근 클로바 케어콜은 초대규모 AI로 확장하여 단순히 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식이 아닌, 시민과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가능하게끔 고도화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중장년 가구에 전화를 걸어 식사, 수면, 운동 등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도 정식 오픈했다. 기계적인 말동무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주고받은 대화를 기억해 다음 전화에 반영하고 공감능력을 크게 향상해 과거 가족이나 지역공동체가 담당하던 역할을 AI가 대체·보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음료에 대한 로봇 운반, 무인택배와 드론배송, 밤 귀갓길을 함께 하는 로봇, 산불이나 산사태 현장에 대한 드론·위성영상 활용 등이 지방도시에서의 삶을 지지하는데 유용한 기술이다.

인구감소시대 지방도시 생존전략*

: 정주인구에서 관계인구까지

소속 건축공간연구원 공간문화본부

성명 장 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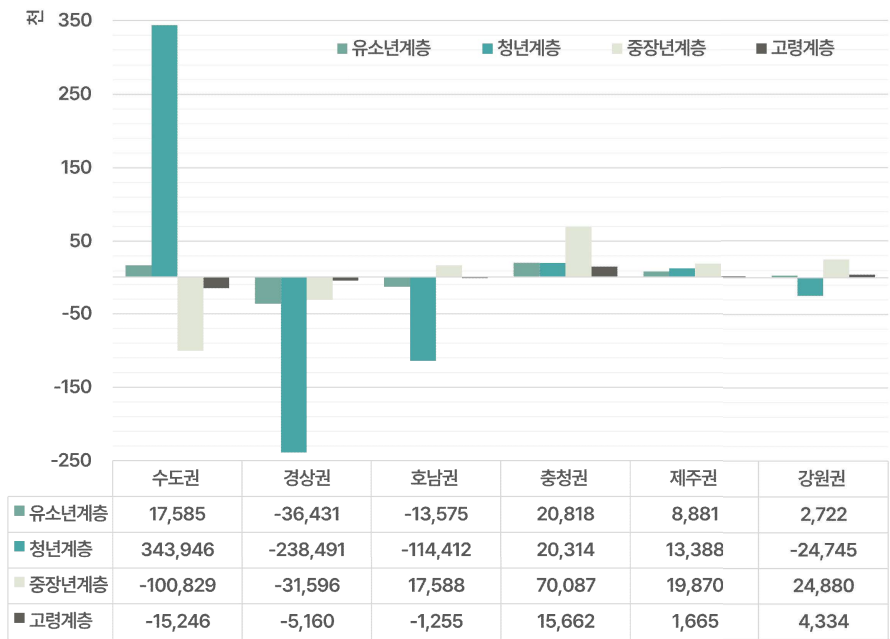
인구감소 위기를 마주한 지방도시

지방소멸 위험을 경고한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2014) 이후, 국내에서도 도시와 지역의 소멸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인구 감소, 출산율 저하 등의 인구학적 특성과 도시의 재정여건, 부동산 방치 문제들을 바탕으로 도시 진단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지방소멸이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0년 우리나라 인구는 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자연감소 하였고,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이 발생하면서 지방소멸 문제를 현실로 마주하게 되었다. 특히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지방도시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인구의 대부분이 청년층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역의 핵심 인적자본인 청년인구의 감소는 사회인프라 축소, 정주환경 악화, 원도심 쇠퇴로 이어져 지역의 존속기반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

* 본 원고는 장민영 외(2021).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조성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장민영(2022), 청년의 지방이주와 지속가능한 지역살이를 위한 과제. 건축과도시공간. 45. 건축공간연구원의 일부 내용을 발췌·보완하여 작성

려가 제기되고 있다(엄창옥 외, 2018).*



[그림 1] 권역별 인구이동 현황(2016~2020)

출처: 국가통계포털 국내이동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지난 10년간 전국의 청년인구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인구 50만 미만의 지방중소도시에서의 감소율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최근 5년간 지방도시의 청년 343,946명이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기회, 풍부한 여가문화 생활을 좇아 수도권으로 이동하였고, 이는 청년인구 전체 이동량의 91%에 달하는 수치로 나타났다(장민영 외, 2022).** 한편, 청년인구 유출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 곳은 경상권으로 소멸위험지역이 다수 위치한 곳이기도 하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엄창옥 외(2018). 청년의 귀환. 서울:박영사

** 장민영(2022). 청년의 지방이주와 지속가능한 지역살이를 위한 과제, 건축과도시공간. 45. 건축공간연구원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창출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2021년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소멸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역성장과 균형발전의 전략으로서 부울경, 충청권 등의 초광역 협력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자리, 교통, 주거 등 생활기반이 부족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화하였다. 그 일환으로 2021년 10월,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였고, 2022년부터 매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집중 투자*될 계획이다. 지역실정을 잘 아는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인구사회적 측면과 지역발전 측면을 함께 고려한 융합적 전략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여건 및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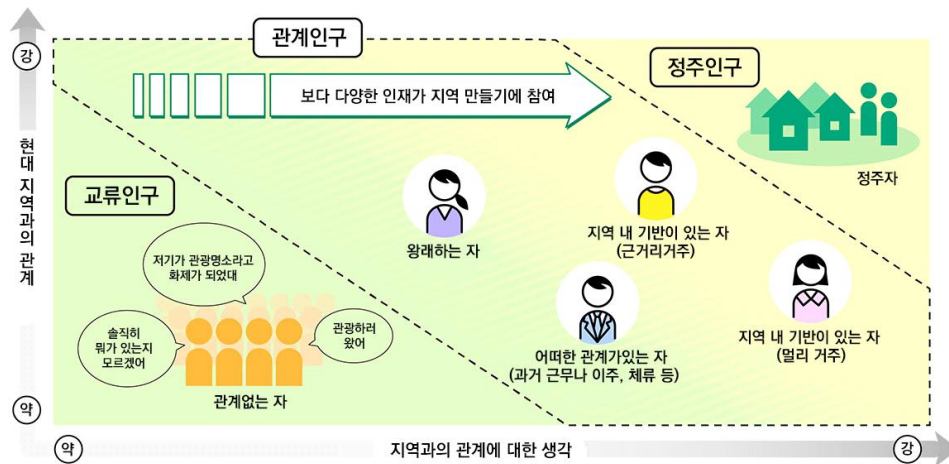
인구 늘리기 경쟁에서 인구 유입 경쟁으로

소멸위기 지방도시의 인구전략은 국가총인구 관점에서 접근하는 저출산 대책과는 다른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출산율 제고를 통한 인구 늘리기 대책으로는 더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문제는 사회적 유출로 인한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 이에 각 지역에서는 앞다투어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로섬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박진경, 2021).** 즉, 정주인구 확보에 초점을 맞춘 현행 정책의 방향과 대상 범주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내 인적자원이 부족한 지방도시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주체이자 중장기적으로 지역에 이주 가능성이 높은 ‘관계인

* 2022년 8월,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 제출한 1,691건의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22~2023년 사업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하였다.

** 박진경(2021),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 공청회 진술서. 「인구 및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입법 공청회.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구**를 영입하고 정주민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고민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그림 2] 일본 총무성의 관계인구 개념

출처: 関係人口ポータルサイト, <https://www.soumu.go.jp/kankeijinkou/about>

정주민구에서 관계인구까지

지방소멸이라는 사회적 시급성 때문에 지역에서는 인구 확보를 위한 정책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그러나 아직 주민등록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에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정책들은 ‘주소지 이전’이나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를 지원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관계인구를 비롯한 다양한 인구개념과 범주**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주 인구를 넘어서 관계인구를 확보하는 것은 지방이주 잠재력을 가진

* ‘관계인구’는 일본 총무성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으로 정주민구나 관광으로 온 교류인구가 아닌 지역과 다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출처: 関係人口ポータルサイト, <https://www.soumu.go.jp/kankeijinkou/about>)

** 대표적으로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주민등록으로 등록된 사람, 통근·통학, 관광·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 등을 가리킨다(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제18877호). ‘체류인구’는 관광, 직장, 업무, 교육, 생활서비스 등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 지역에서 방문하여 하루(1일) 이상 머무르는 인구를 가리키며, ‘교류인구’는 해당 지역의 방문과 관계없이 어떤 이유로든 지역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출처: 전대욱 외, 2021, 행정수요의 실질적 반영을 위한 새로운 인구개념 검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소영·김도형, 2021, 작지만 강한 연결: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제자료

인적자원을 찾는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최근 다양해진 라이프스타일과 로컬 지향 세대의 등장은 지방도시로 새로운 사람의 흐름을 만들기 위한 관계인구 확보 전략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관계인구 확보를 위해 지역의 일자리 정보, 부동산 정보, 지역주민들과 교류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관계안내소, 관계안내인 등), 관계인구가 ‘살아보기’를 넘어 ‘살아가기’로 나아갈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관계안내소’와 ‘관계안내인’

- 일본에서는 지역주민과 관계인구의 연결, 우발적 만남, 거리를 좁히기 위해 관계안내소(장소)를 조성하거나 관계안내인(사람) 역할을 수행, 다양한 이벤트와 기획을 추진하고 있음
- 관계안내소 : 지역주민과 관계인구가 우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
 - (기능) 지역 내 일자리·부동산 정보·활동 소개, 주민과 자주 부딪칠 수 있는 이주 컨시어지 기능
 - (구성) 주민센터나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 일부 활용, 빈집이나 폐교 등 유휴공간 활용(완충시대 공간)
 - (운영) 공공운영(중간지원조직), 민간운영(카페, 서점, 코워킹스페이스, 게스트하우스 등 장소 활용)
- 관계안내인 : 지역주민과 관계인구를 연결하는 사람, 중간지원조직 등
 - (역할) 관계안내소를 운영하거나 관계안내소의 기능 수행

출처 : 장민영 외(2021),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조성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p.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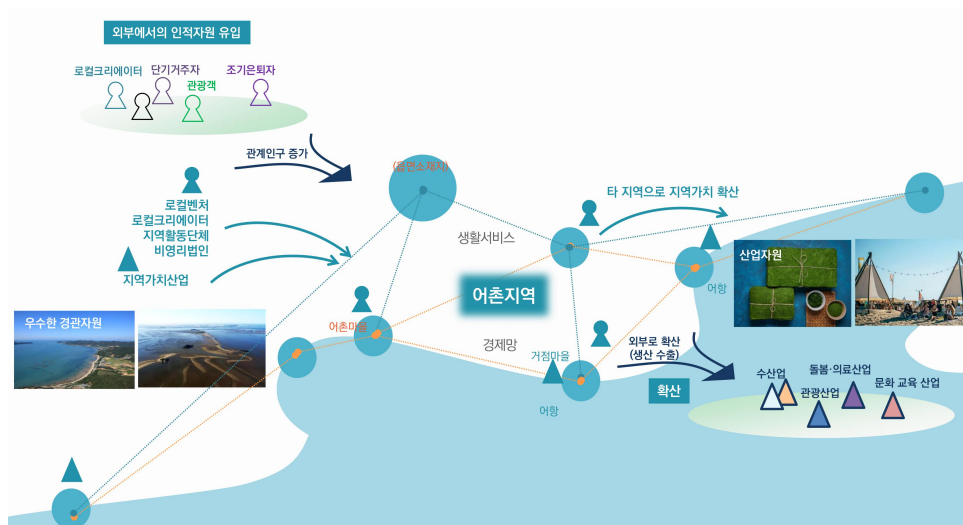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마을의 생활·경제 생태계 구축

인구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마을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동네 생활권 중심의 생활·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 정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건축공간연구원 마을재생센터 내부자료

일례로 해양수산부에서는 인구감소시대 어촌의 생활·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한 어촌·어항 재생모델로서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촌생활권을 중심으로 복지·교육·돌봄·문화 등의 생활서비스를 연계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지역주민 유출 최소화, 관계인구 유입, 어촌·어항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 경제활동 주체의 유입·육성 등 일자리 창출을 지향한다.

본 사업은 ‘현장완성형’ 사업이자 ‘민·관 협력형’ 사업으로 추진된다. 역량 있는 민간조직이 ‘어촌 앵커조직’으로 참여하고, 앵커조직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내 생활서비스 연계 및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지역주체(링커조직)를 발굴·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림 3] 어촌활력증진 지역 시범사업 추진방향

출처: 해양수산부·건축공간연구원(2021). '22년도 Post-어촌뉴딜,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 설명회 자료, p.26

맺음말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지방도시의 생존전략 마련 경쟁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저성장, 인구감소시대 지방도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비전과 지역수요 맞춤형 공간관리 전략, 지역자원 기반의 지속 가능한 마을생태계 구조로의 재편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실행전략과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인구감소시대 지방도시 생존전략이 될 것이다.

미래 농촌공간이 사는 법 : 농촌다움의 보전과 창조*

소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성명 손 용훈

인구감소 시대 : 농촌소멸의 위기와 농촌재생의 기회

일본의 전 총무대신이었던 마스다 히로야를 좌장으로 한 일본창성회의에 서는 미래 가임여성의 수가 급감할 것이라 예상되는 지방도시들을 추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도시를 ‘소멸가능도시’라고 하였다. 유행하는 지방소멸이란 말은 여기서 기원한다. 일본뿐 아니라 최근 우리 사회도 유래없는 낮은 출산율과 인구감소 문제로 인하여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구감소는 국토 전체에 영향을 주지만, 젊은 인구가 모이는 대도시 에 비해서 지방도시와 농촌은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예산이 처음 편성된 2006년 이후 2020년까지 15년 동안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된 사업의 총예산액을 모두 합하면 380조가 넘는다고 한다(노컷뉴스, 2021.9.21.). 하지만 국내 출산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1.13이던 출산율도 0.84로 떨어져 현재는 세계적으로도 거의 최하위권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인구감소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

* 본 발표자료는 농촌진흥청 연구사업인 농촌다움 보전을 위한 농촌공간 재생능 평가체계 구축(과제번호: PJ0170622022)의 연구의 일부 내용을 소개한 것임.

제가 아니며 이렇게 생각하면 국토의 미래가 매우 비관적인 것 같다. 일본에서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가 국가 차원에서 깊게 논의되고 있지만, 흥미롭게도 일부에서는 일본사회가 맞이할 앞으로의 미래를 개발보다 삶의 가치를 중시하는 성숙시대, 혹은 로컬 지향의 시대로 예견하고, 비록 지방소멸의 위기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농촌이 가지는 긍정적 가치를 잘 유지한다면 그런 농촌은 미래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처럼 농촌의 미래를 낙관하는 주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재생의 키워드는 도시민의 ‘전원회기’ 성향,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지역자원 보전형 경제’, 새로운 주거 미래로서 ‘저밀도 거주지역 구상’, 경제적, 물질적 성장에서 ‘가치의 경제’로의 전환, 획일적인 이미지의 농촌에서 벗어난 ‘지방의 창조계급’ 등장, 단순히 귀촌자 인구 수 증가를 볼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유입인구에 대한 질적 평가’, 경제 침체에도 탄력성 있게 적응 가능한 경제단일 직업이 아닌 ‘다업화’ 등이다. 이처럼 변화하는 사회의 동향과 이에 따른 미래사회 농촌이 가지는 가치는 지금까지 우리가 농촌을 바라보는 관점과 매우 다른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평가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인구감소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난제이지만, 모든 지방도시와 농촌이 같은 문제를 같은 영향으로 접하는 것은 아니다.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쇠퇴하는 지역도 존재하겠지만, 반면 어떤 곳은 지역의 가치와 매력을 잘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번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소멸의 위기에 맞서, 앞으로 농촌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여야 한다.

고전적으로 농촌이 가지는 정주공간의 가치는 목가적, 전원경관, 농업과 생태, 자원순환의 자족도시, 인간적인 적정 규모의 정주공간, 자연에 기반한 생태보전의 인간과 자연의 공존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대표적인 농촌 휴양지 코츠월드(Cotswold)는 영국인들이 여름 휴가에 방문하고 싶어하는 인기 목적지 중 하나이다. 코츠월드의 전원경관과 운치있는 마

을 호텔, 지역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즐기는 사교적 모임의 장소인 펍 등은 코츠월드를 방문한 여행객들에게 농촌 생활의 매력을 쉽게 경험하게 한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화가 점차 진행되면 될수록, 코츠월드와 같은 장소는 점차 더 귀하고 매력적인 장소가 될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고, 방문하고 싶어하는 경쟁력 있는 장소가 된다.

우리나라 농촌의 농촌다움 관리 현황

우리의 농촌도 고유의 지역문화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존재하지만, 최근까지 무분별한 토지이용으로 인하여 농촌공간의 매력이 잘 유지되지 못하고 훼손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적절한 공간규제 없이 무계획적으로 설치되는 축사,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근교 농촌지역의 공장 및 창고건물과 송전선, 태양광 발전시설 등은 농촌이 가지는 경관적 가치를 이미 많이 훼손하고 있다(손용훈 외, 2014).* 예를 들어 군의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의 경우도 현재 태양광에너지시설, 창고, 축사 등이 평탄지와 낮은 구릉지를 중심으로 여기저기 넓게 분포하고 있다. 농촌다움의 가치를 잘 보전하고 관리하고자 한다면, 개발사업에 앞서 농촌다움을 간직한 공간자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상대적으로 지역의 농촌다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간을 찾아서 개발을 유도하는 계획적인 방법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 농촌공간은 농촌의 부흥을 위한 개발사업, 활성화사업, 혹은 낙후된 농촌을 지원하는 지원사업 등 대부분이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농촌공간에 대한 계획적 관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농촌개발사업은 농촌다움을 유지하도록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농촌다움의 가치를 점차 저하시키는 역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하였

* 손용훈·이차희·사이토. (2014). 공장입지에 따른 대도시 근교지역 농촌마을의 경관변화 특징. 농촌계획. 20(1): 13-26.

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이는 방문객들은 물론 현재 거주민들에게도 살고 싶은 공간,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서의 매력을 잃게 된다. 더 심각한 지역소멸의 문제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만들게 된다. 비록 농촌다움에 대한 복원사업이나 농촌협약, 농촌재생 뉴딜 사업 등에서 ‘농촌다움’라는 개념이 주요 목적으로 적지 않게 언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농촌다움의 개념은 학계나 현장에서 충분하게 정립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농촌다움은 각 개인이 생각하는 추상적인 개념의 이해에 머물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실시된 농촌다움 복원사업도 농촌공간을 대상으로 한 과거의 농촌 활성화 사업과 구별되지 않고, 사업시행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

농촌성과 농촌다움에 대한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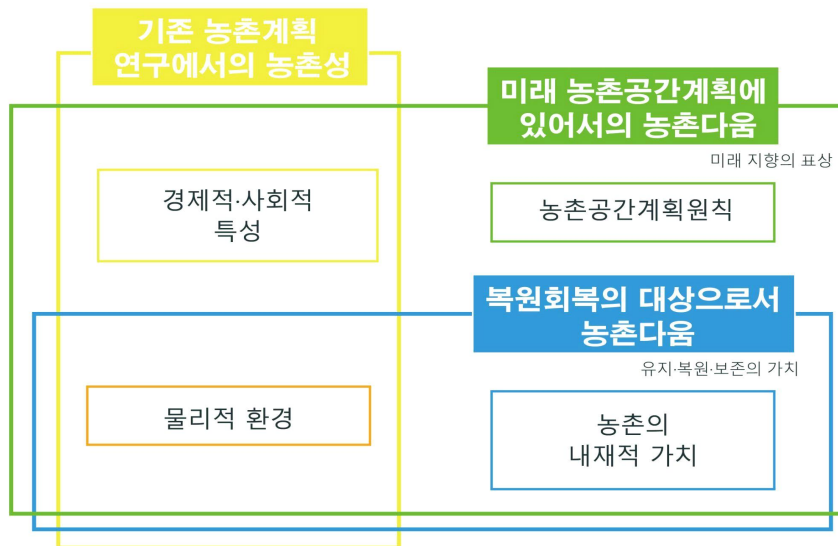
농촌다움은 “우리 농촌이 가지는 긍정적인 가치로, 자연성, 향유성, 전통성, 쾌적성 등의 유·무형적 가치와 이를 나타내는 물리적 환경으로서 경관”을 의미한다. 농촌다움에 관련한 연구의 흐름을 국내외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면, 크게 농촌다움의 연구 동향은 ‘농촌성’, ‘기존의 농촌다움’, ‘미래 공간계획’의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중 농촌성은 도시와 구별된 농촌공간이 가지는 성격을 말한다. 이는 과거 도시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저개발지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도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에 착안하여 농촌이 지닌 오염되지 않은 환경과 건강, 휴식 등의 가치나, 농촌이 가지는 자연, 문화, 역사, 생활방식 등에서의 긍정적 이미지 등을 의미한다. 이미지로서의 농촌성의 인식 주체는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 보다는 주로 도시민들의 시각에서의 느끼는 농촌의 이미지를 말한다. 농촌성이라는 용어가 부정적, 혹은 극정적인 농촌의 이미지를 모두 담고 있다면,

농촌다움은 농촌이 가지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말하는 개념이다. 농촌다움은 농촌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 과거 농촌이 만들고 유지해 온 농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농촌다움을 담은 대표적인 요소로는 ‘농촌경관’과 ‘농촌어메니티자원’이 있다. 농촌경관은 농촌다움을 유지하고 보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며, 농촌어메니티는 농촌공간의 현장에서 농촌다움을 느끼도록 하는 유형적, 무형적 자원을 통틀어서 말한다. 농촌경관과 농촌어메니티자원은 곧 농촌관광의 자원이 되며 이러한 농촌관광의 자원은 도시민들이 농촌을 방문하는 목적지가 되거나 농촌체험 등 농촌을 경험하는 활동의 장소가 된다. 개념적으로 농촌다움의 복원이란, 과거 존재했던 아름다운 농촌경관과 농촌어메니티 자원이 개발사업이나 사회적 환경변화로 훼손되거나 소멸되었을 때, 전통적으로 유지해 온 긍정적인 속성을 되살려 아름답고 매력적인 정주공간을 다시 복원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농촌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변화는 점차 커지고 있고, 도시와 농촌의 관계 또한 점차 더 밀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으므로 복원의 대상으로서의 농촌다움을 정의하고 복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도시로부터의 수요나 농촌지역에서의 내재적 수요로 인하여 전통적인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힘은 점차 약해지고, 반대로 이를 변형시키는 압력은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농촌의 발전상이 필요하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이에 따라 농촌에서의 활동과 농촌에 대한 기대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농촌의 모습만 생각하고 회귀하자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미래지향적이지도 못하다. 새로운 농촌경관에 맞는 공간계획 아이디어의 창조가 요구된다. 앞으로 농촌은 다원적인 가치를 담은 미래 농촌계획으로서의 농촌다움이 연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촌다움은 앞서 말한 추상적인 농촌 이미지와 구분된다. 미래 농촌계획의 원칙으로 현실의 농촌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농촌다움은 농

발제자료

촌이 가지는 내재된 가치의 회복과 함께 미래 농촌공간을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농촌다움의 개념

출처: 이동윤·손용훈. (2021). 한국 농촌다움 개념 연구-농촌다움과 농촌성 연구 비교 중심으로. 농촌계획. 27(3): 69-84.

농촌다움에 기반한 농촌공간계획

다음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실제 공간계획에서 농촌다움을 어떻게 보전하고, 유지하며,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다. 먼저 분명히 할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농촌다움이며, 가치인가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농촌 활성화 사업은 농촌, 농민, 농업을 상호 매우 밀접한 요소로 두고, 묶음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법의 정의에서 농어촌, 농어업, 농어업인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함께 정의된다. 물론 농어업인의 보호와 삶의 질 개선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을 연결한 관점에서, 또 농촌에서 생활하는 생활인구의 관점에서 농촌공간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기존의 농어

촌, 농어업, 농어업민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농촌계획보다는 더 포괄적인 주제와 형태로 농촌다움을 생각해야 한다.

최근 유럽에서는 도시와 농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때, 농촌공간은 도시인들의 삶을 더 건강하게 하는 소중한 ‘휴양공간’으로 인식된다. 나아가 기후 위기의 시대에 농촌은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으로서의 도시를 지지하는 중요한 ‘배후 공간’으로서 역할한다. 또한 유럽의 경관협정 이후, 경관의 주 관심은 ‘경치’보다는 생태성, 지속성, 문화성 등을 반영한 공간계획단위인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때 농촌공간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적응, 생산, 문화창조 등의 다양한 실제 사례를 담은 ‘사회생태학적 경관’이다. 농촌경관은 국가의 사회생태학적 정체성을 담은 ‘기록의 장소’로, 보전하고 관리해야 할 국토경관이다.

또한 농촌다움은 농촌지역 뿐 아니라 도시 주변부의 교외지역의 계획 방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도시의 주변은 비정상적으로 개발된 도시 스프롤의 문제를 가진다. 최근 미국에서 대도시 주변의 공간계획에서 도시 스프롤을 해결할 공간계획원칙으로 농촌다움에 주목하고 있다. 이때 농촌다움은 도시 근교의 저밀도의 비교적 자연이 풍부한 공간에서 새로운 정주환경을 재발견하고 실천하는 삶을 말한다. 이는 생활양식 차원의 농촌다움이다. 또한 공간계획 차원에서는 농촌의 공간적 특징인 자연에 대한 조화가 반영된 계획설계로 자연기반해법, 그린인프라스트럭처, 생태계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계획 공간을 말한다. 도시근교의 개발 방향이 단순히 도시화 혹은 도시개발의 확장이 아니라,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된다면 현재 도시 주변에 나타나는 여러 토지이용의 패턴과 이로 인한 문제들을 재고하고, 공간이 가지는 가치를 더 강화하고 새로운 매력을 창조하는 장소를 만들 수 있다.

농촌다움을 활용한 공간계획과 경관구역

독일의 도시 Dessau-Rosslau(인구 약 8만명)에서는 "도시중심 및 경관구역"이라는 도시개발 개념을 설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경관구역 내에 난립한 건축물의 철거를 유도하고 도시 중심부에 기반시설을 더 집중하여 기반시설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조성된 신도시 사업과 인접한 농촌의 경관은 도시의 녹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계획한다. 도시 내부로 농경지를 확장시켜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경작지와 녹지를 연결하는 것을 계획의 기본원칙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경관구역 내의 농촌경관은 도시녹지와 연결되고, 이는 일반적인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생태적이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국내의 도시 주연부의 도시개발의 사례에서는 농촌경관이 가지는 장점을 도시녹지로서 활용하기보다는 상호 이질된 토지이용이 만나서 잠재적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는 사례가 더 일반적이다. 하나의 예로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일원에 조성되는 웰링시티 신도시 개발사업은 202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완주군 농촌지역의 대상으로 조성된 신도시 사업으로 91만 m², 수용 인구 6천세대의 미니신도시이다. 웰링시티 미니신도시는 경작지와 축사에 둘러싸인 전통적인 농촌지역 한 가운데에 조성된 신도시이다. 현재는 지방로 삼봉로를 마주하고 신도시와 경작지 및 축사라는 이질적인 토지이용이 직접적으로 접해 있어서, 입주할 신도시 주민들은 경작지로부터의 비산 먼지나 축사로부터의 악취와 정돈되지 않은 작업시설 등이 생활환경을 주변에서 보게 된다. 반대로 농가는 과거 농경지만 있던 환경에 크게 변화하여, 앞으로는 근린에 위치하는 아파트 주민들을 고려하면서 농업을 해야 하니 작업의 불편함이 존재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아파트 주민으로부터의 민원에 대한 불안감도 느끼게 된다. 현재는 신도시 사업의 초기 단계지만 향후 신도시 사업의 완료되고 입주민 수가 더 많아지면 이러한 현상은

더 커질 것이다. 독일의 사례와 같이 주택개발사업에 있어서 경관적으로 양호한 농지 등을 선별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경관구역으로 활용하거나 서로 다른 토지이용의 형태가 직접적으로 맞닿지 않도록 버퍼가 되는 녹지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등의 장치가 만들어진다면, 농업공간은 장기적으로 볼 때 도시민들이 접근가능한 녹지로서 더 큰 공간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소도시(Small Town) 가치의 재발견

Annett Steinfuhrer(2016)*은 그의 글에서 독일에서 소도시란 "인구 5,000 ~ 15,000 명의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지 않고, 주변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라고 정의하였다. 독일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30%가 이와 같은 소도시에 거주한다고 한다. 소도시는 물리적 환경으로 볼 때 도시와 농촌의 중간 형태의 거주공간이다. 하지만 소도시는 단순한 큰 도시의 축소판만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소도시는 도시와 농촌의 삶을 모두 향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매력적이다. 비록 소도시에서의 생활 서비스는 큰 도시에 비해서 풍족하지는 않을수 있으나 소도시에 거주하는 적정의 인구가 안정적으로 소비하는 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살기에 불편함이 없다. 특히 유럽에서는 코로나 이후 일상에서 접하는 자연환경이 가깝고 건강한 도시 등이 살고 싶은 정주지로서 이슈화되면서 소도시에 대한 관심이 더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므로, 소도시에 대한 관심과 이주 희망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소도시는 고유한 정주 매력을 가지는 공간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소도시에 관한 연구가 주된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농촌에 대

* Annett Steinfuhrer. (2016). Ruralism. The Future of Villages and Small Towns in an Urbanizing World; Living in a Small Town: An Urban and a Rural Experience at Once; Berlin: Jovis.

한 연구는 마을 정주권, 도시의 연구는 주로 대도시와 중도시의 거주환경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김병수와 여홍구(2010)*의 연구에 의하면 도시는 크게 대도시(100만 이상), 중도시(인구 50~100만), 중소도시(인구 10~50만), 소도시(인구 5~10만)로 정의하고 있어, 유럽에서 말하는 소도시(Small Town)는 이러한 기준에서는 소도시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 정서에서 유럽에서 말하는 소도시(Small Town)를 말하려면 아마도 작은 소도시인 소소도시라고 강조해서 불러야할 것 같다.

그리고, 농촌연구에서는 소도시 보다는 농촌중심지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이는데, 도시 혹은 정주공간 자체로서의 특성보다는 배후 농촌지역에 제공하는 중심 기능에 주목하는 측면이 있다. 고영구 외(2003)은 농촌 중심지를 대략 2천~5만명 수준의 농촌지역으로 배후지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송미령 외(2020)** 또한 농촌 중심지는 배후 농촌 지역에 생활 서비스를 원활히 공급하고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였으며, 배후 지역과의 관계에서 갖는 중심성을 가지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소소도시가 가지는 문화적인 특수성과 정주공간으로서의 매력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이보다는 농가 및 농업을 대상으로 한 배우 농촌의 중심지로서의 특징이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인지 작은도시(타운, town)를 뜻하는 읍(邑)이라는 말조차, 일반인의 이미지에서는 도시보다는 농촌 중심지의 이미지가 강하다. 소소도시의 특징은 주변 지역에 대한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것과 더불어 농업 종사자가 아닌 일반 주민을 포함한 생활인구가 거주하는 공간이다. 또한, 대도시와 구별된 특징

* 김병수·여홍구. (2010). 우리나라 도시의 유형별 기능 특성 비교. 국토지리학회지. 44(4): 537-552

** 송미령 외. (2020).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개편 방향 연구: 농촌중심지 유형 구분 및 거점서비스 진단 기준 개발을 중심으로. 농촌경제연구원

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과 밀접하고 고유한 지역문화와 커뮤니티를 가지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미래 살고 싶은 농촌, 일하고 싶은 농촌이 되려면 그 중심에는 농가 뿐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들에게도 소도시의 정주 매력을 높이는 계획설계적 관점이 필요하다.

우수한 농촌공간의 보전

영국의 자연절경지역(AONB, Area of Outstanding Natural Beauty)은 영국 고유의 농촌경관이 가지는 자연미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보전관리하는 지역이다. 영국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 생태계 등의 보전을 중심으로 한 생태적 자연미 보전과, 인간이 자연에 적응하면서 만들어진 문화경관으로서 영국의 전원경관을 보전하는 문화적 자연미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자연절경지역(AONB)은 문화적 자연미를 보전하는 지역이라고 하겠다.

주무관청은 환경식품농무부 산하의 Natural England이며,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46개소, 잉글랜드와 웨일즈 전국토 면적의 18%가 지정되어 있다. 자연절경지역(AONB)의 주된 목표는 영국 농촌경관의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촌은 도시민 등이 바라는 전원에서의 즐거움을 위한 니즈를 충족시키고, 그곳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황길식, 2019).* 자연절경지역(AONB)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경관농업지역이나 명승과 같이 좁은 면적의 대상이 아닌, 하나 혹은 복수의 행정구역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자연절경지역(AONB)에 지정된 지역에 있어서 미래 비전은 분명하다. 여

* 황길식, (2019). 영국의 농촌경관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 AONB. 한국경관학회지. 11(1): 122-129

기에서는 지역의 고유한 경관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과 농업, 임업 등 지역의 전통적인 1차 산업이 주된 산업이다. 그리고, 경관관리계획을 통해서 지역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산업이나 개발행위는 규제를 받게 된다. 지자체와 주민들이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보전하는 것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의 규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기보다는 대부분의 주민이 동의하고 따른다. 농촌다움을 보전하는 대가는 높은 공간가치와 관광 혹은 높은 농산물의 부가가치 등으로 연결되고,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돌아오는 혜택을 주민들이 함께 누린다. 아름다운 경관으로서의 공간 가치는 결국 지역의 경제와 문화사회적 지속성을 유지하는 주된 동력이 된다. 많은 영국인들에게 있어서, Shouth Devon, The Chilterns, Cotswold 등의 자연절경지역(AONB)은 여름 휴가에 꼭 한번 방문하고 싶은 장소이자, 은퇴 후 거주하고 싶은 장소이며, 여유롭게 일하며 살고 자연을 즐기는 삶의 질이 높은 지역으로 인식된다.

국내에서는 영국처럼 잘 보전된 우수한 농촌경관이 한정적이다. 비록 현재는 우수한 경관으로 잘 보전되고 있지 않더라도, 미래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형성할 잠재력이 있다면, 이러한 지역에서는 농촌다움의 주 목표로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지키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미래 농촌공간이 사는 법

농촌이 가지는 농촌다움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물리적 환경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변화하는 사회에 있어서 귀촌, 인구구조 변화, 새로운 비즈니스 등과 같은 내적 요인의 변화와 농촌공간에 관한 사회적 기대, 국제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도 미래 농촌의 발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미래 농촌공간의 계획원칙으로서의 농촌다움은 우수한 자연환경, 문화환경 등 농촌이 가지는 가치 있는 경관의 보전

(Conservation)과 도시와 구별된 농촌의 특성인 작물 재배 등 지역에 맞는 농업 생산성의 구축(Cultivation) 등이 그 기반이 된다.

또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와해되어 가는 농촌사회의 커뮤니티를 재구조화하고 재건하는 것은 미래농촌의 공간계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농촌에 있어서 새로운 거주공간의 구성과 기존 농촌마을과의 연계, 비농업적 비즈니스와 농업의 공존과 상호연계, 전원적 환경의 향유공간으로서 농촌의 활용을 위한 공간계획 및 커뮤니티 디자인 등은 농촌공간을 둘러싼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들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해법을 찾는 창조성 또한 농촌공간계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 농촌에서도 젊은 청년들이 유입되어 새로운 일과 삶의 형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농촌에서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개인과 단체들이 들어와서 기존에 없던 창조적인 생산, 정주, 커뮤니티 공간의 구성을 위해서 실천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더 관심을 두고 현장에서 공간계획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론화하고, 계획설계에서 활용하며,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토론자료

홍석영 (농촌진흥청 과장)
김태형 (서울대학교 교수)
윤주선 (충남대학교 교수)
안재락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고광본 (서울경제 선임기자)

도시와 농촌의 조화가 필요한 시기

소속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성명 김 상범

누구나 살고 싶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도시와 농촌분야에서는 항상 추구하는 목표이자 과제입니다. 최근 지방소멸, 인구감소 등의 사회적 이슈와 국민의 다양한 니즈는 도시, 농촌 모두 조금 더 나은 공간을 만들고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물리적 개발과 확장보다는 기능적 균형과 연계가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촌공간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농촌을 개발이 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기능적, 문화적, 환경적 공간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도 농촌공간의 기능적 재생,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주민의 참여와 역할 등을 다양한 전략과 사업들이 포함한 농촌공간계획으로 만들어가고자 법 제정과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촌다움, 농촌재생에 대한 개념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활 편의 등 거주민이 원하는 핵심 요소를 파악하여 농촌을 정비하고, 농촌의 일자리, 창업 등을 통해 새로운 공간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SOC는 다른 나라와 견주어도 상위권인데 도시를 제외한 농촌 지역은 잘 구축되어 있는 SOC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농촌에 필요한 기초적인 생활서비스 인프라를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계획가 분들이 현장과 소통을 지속하면서 불편한 점을 분석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이를 고려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농촌공간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어떤 농촌공간을 만들 것인지 미래 농촌상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와 다른 농촌의 특성(농촌다움)을 보전하고 발전시키는 농촌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동시에 인구구조의 변화, 농촌사회의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다양한 여건변화에 따른 예측도 필요합니다.

‘농촌다움’은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살고 싶은 농촌공간을 만들어가는 동력으로 활용하여, 거주민의 행복과 지역마다의 정체성을 담을 때 구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협약과 공간정비사업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사업을 지자체와 추진하고 있고, 몇 년 후에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촌계획에 기반한 목표와 사업이 유기적으로 추진되려면 데이터에 기반하여 지역 여건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과 방법을 선정, 시행, 모니터링하는 방안 필요합니다.

농촌진흥청은 다각적으로 농촌공간계획 정책과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R&D 과제를 크게 두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촌

정책 및 계획을 지원하는 농촌 데이터 구축과 공간분석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이고, 두 번째는 농업·농촌의 디지털 전환, 돌봄, 청년 창업공간, 기후·에너지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공간재생 모델 개발입니다.

이러한 R&D 연구는 농촌현장의 문제 해결과 농촌다움 복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농촌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고 정책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관련 부처 특히 농식품부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 촌 다 움 의 재 발 견

소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성명 김 태형

지방소멸(local distinction), 인구감소(population decline), 도시쇠퇴(urban shrinkage)란 모두 공간적 지속가능성을 상실한 공간에 부여하는 이름이다. 공간적 지속가능성(spatial sustainability) 개념은 지속가능성에 대해 개체와 서식지 간의 관계를 정립한다는 데에서 남다르다(Neuman, 2005). 일반적으로 경제-환경-사회 간의 평형상태를 일컫는 균형(balance), 쇠퇴하지 않는 성장과 소비를 보장하는 환경용량(carrying capacity), 그리고 개체가 서식지에서 유지될 수 있는 정도인 적합성(fitness), 반대로 서식지가 개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서 회복탄력성(resilience), 서식지 내 개체의 다양성(diversity) 등 대략 다섯 가지로 측정된다. 공간적 지속가능성은 도시와 지역의 목표이다. 그러나 서식지 내의 개체의 목표는 지속가능성(또는 영속성)일 수 없다. 개체의 경우,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삶의 질은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철학 등지에서는 웰빙(well-being)이나 행복(happiness)으로 개념화하고 연구해 왔다.

공간적 지속가능성과 공간에 거주하는 개인과 집단의 행복은 하워드의 전원도시(Garden City), 르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Radiant City)로부터

시작해서 현대에는 압축도시(Compact City), 뉴어버니즘(New Urbanism), 신전통개발(Neo-Traditional Development) 개념으로 이어지고 대중교통 지향형개발(Transit-Oriented Development) 및 직주균형(Jobs-Housing Balance)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도시 경관(건조환경)에 대한 재해석으로서 뉴어버니즘에 비해 농촌 경관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은 상대적으로 일천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뉴루럴리즘(New Ruralism) 또는 농촌다움에 대한 정립은 조경학 및 도시계획 분야에 중요한 주춧돌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뉴루럴리즘이 지방소멸 및 이에 따른 부정적 효과(낙인효과, 깨진 유리창 효과)의 대응으로서 제기된 데에서 도시쇠퇴에 대한 해답으로서 뉴어버니즘의 제2세대 도입에 촉진제가 될 것으로 믿는다.

한편, 농촌다움을 “우리 농촌이 가지는 긍정적인 가치로, 자연성, 향유성, 전통성, 쾌적성 등의 유무형적 가치와 이를 나타내는 물리적 환경으로서 경관”이라고 파악하는 규범적 정의는 퍼지 컨셉(fuzzy concept) 논쟁을 불러 일으킬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Markusen, 1999). 이는 우산 개념(umbrella concept)으로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개념이 받아 온 비판을 반면교사로 삼으면 될 것이다. 초기의 지속가능성 계획은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매력적인 수사로 가득한 실체가 불분명한 작업으로 주로는 시민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도구로서만 사용된 바 있다. 실체가 불분명하므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도 일정하지 않았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도 어려웠으며, 계획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도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농촌다움을 조작 및 측정 가능하고, 재생 가능하며,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시간과 공간을 달리 하여 확인함으로써 보강될 것이다. 이러한 고된 작업을 발표자께서 진행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한다.

지방도시가 생존가능하려면

소속 경상국립대학교

성명 안 재락

저는 10여년 이상을 중소도시에서 총괄계획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해군의 총괄계획가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 일하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을 발제를 들으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지만,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이상적 제안이라는 느낌을 받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현지에서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현실은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겪고 있는 경험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도시의 쇠퇴양상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남해군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쇠퇴 양상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마을 단위와 읍의 쇠퇴 양상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해군에 한정된 자료입니다만, 인구만 보더라도 남해군의 마을 단위 인구는 피크 시에 비해 최소 73%에서 최대 88%까지 감소되었습니다만, 읍의 인구는 29% 감소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면 단위 인구는 2, 3천명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장민영 연구위원),

생활서비스를 공급(손용훈 교수)하여 농촌중심지의 거주여건 개선을 말씀하시지만, 초등학교조차 없어지는 현실에서 어떤 여건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보면, 인구가 완전히 소멸하는 지역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가끔 소멸지역이 생기는 경우도 깡촌보다는 대도시에 가까운 농어촌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구는 극단적으로 줄어들지만, 소멸을 하지 않는 마을, 이런 마을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농촌마을은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을을 고향으로 하는 분들의 삶의 의지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쓸모가 없어진 집이지만, 처분할 수도 철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관리하기에는 너무 여건이 어렵습니다. 팔지도 않고, 관리도 하지 않아 노후화되어가는 동네를 바꾸어나갈 대안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둘째 농촌은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시골마을이 아닙니다. 도시민들이 상상하는 목가적인 풍경의 농촌은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시민들의 먹거리 공장이라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입니다(캐롤린 스틸). 농촌은 거대한 비닐하우스와 창고, 축사와 태양광발전시설, 어디에서나 보이는 도로 구조물들이 여기저기 산재한 곳이고, 목가적인 자연경관을 지키고 있는 곳은 산간 오지이거나 일부 해안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는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습니다. 농촌의 공장은 도시의 공장보다 삶을 더 고달프게 합니다. 농촌에서 생산하는 산물은 생명체이기에 인간의 의지로 컨트롤할 수 없어 근처에서 살지 않으면 안됩니다. 농촌 공간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남해군에도 ‘워케이션’ 공간(김세훈 교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의 경쟁력을 키우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데 이들이 이 지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수 있을까요? 이들은 서울에 직장을 두고 일시적으로 내려와서 일과 자연을 즐기고 갑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농촌을 누가 어떤 사람이 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현재의 농촌에서 정주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으로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한 우리가 생각하는 목가적인 농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오늘 제시되는 많은 대안은 농촌에 살지만, 생업은 농업 외적인 것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자신의 미래를 걸고 귀촌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들의 꿈과 열정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 집이 없어 꿈을 접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빈집이 지천에 깔려있는 시골마을에 집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남해에 가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집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일손도 없습니다. 농촌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공일자리 등으로 힘든 일을 할 사람들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정을 무기로 농촌으로 온 청년들의 현실은 청소와 서빙 등 도시의 1인 기업같이 일을 해야 하는 현실에 좌절합니다.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농어촌에 막대한 자금이 지원되었고, 많은 공간과 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진정한 오퍼레이터가 없는 이런 공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불을 보듯 합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남해군 공공건축가 중 한사람은 작은 학교살리기 사업을 자문하면서 스스로 귀촌을 결정하고 남해에서 정주를 하였습니다. 그는 남해가 어린 자녀의 교육에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일을 줄이면서 이곳에 정착하였습니다. 대안적 교육여건이 자신의 생각과 맞고,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여건을 찾은 것입니다.

청소년 축구클럽과 같은 스포츠, 예술 등의 클럽도 외국 등으로 향하던 청소년들과 부모가 남해를 찾아오게 하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클럽활동과 학업을 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들 부모들도 일시적이지만 이주를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외로 농촌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동안 저의 경험으로 볼 때, 우리의 이미지 속에 있는 농촌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만들어진 것은 관광지이겠지요. 그곳이 농촌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어설픈 정주환경을 만들기보다는 도시에서 실현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화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을단위의 농촌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가꾸고 지키면서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가능성을 행정이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농촌을 누가 이끌어갈 수 있을까입니다. 그들은 농촌의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들은 농촌에 오래 정주할 것인지, 어느 시기를 제한적으로 보낼 것인지 분명히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농촌은 분명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더 큰 가치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구감소시대, 지방도시와 농촌의 생존 가능할까?

소속 서울경제

성명 고 광본

○ 총인구 감소 시대

- 2021년부터 총인구 감소, 2020년부터 출생보다 사망 많음.
- 15~64세 2020년 3500만 명대에서 2040년 2600만 명대로 급감 전망(65세 이상이 3분의 1)

○ 지방은 소멸위기 우려

- 농촌 공동화 심화, 아기 울음소리 사라짐.
- 창원 등 지방 주요 도시 인구마저 감소
- 서울 외곽 수도권 도시와 세종시, 평택·천안·아산 등은 예외

○ 수도권 집중 막기 위한 노력 백약이 무효 & 오히려 더 심화

-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메가시티 추진 등
- 일자리, 문화, 교육, 병원 등 차이 & 고속철·GTX 등 교통망 발달의 역습(쇼핑·여가·의료 등) & 국지적 빨대효과

○ 지방도시와 농촌 유지 대책

- 저출산 해소를 위한 파격적 지원
- 일자리=대학과 출연연이 산업단지 혁신과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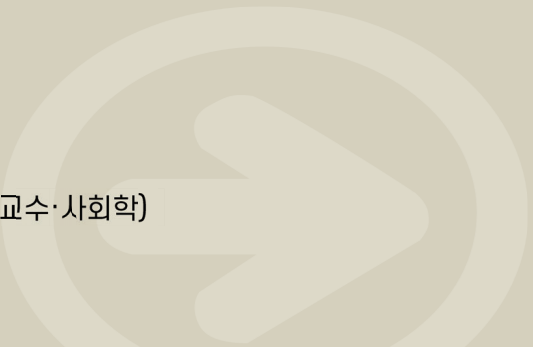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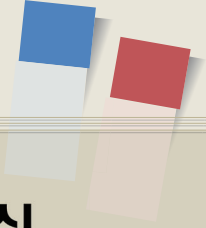
돼야 함.

- 병원, 은퇴한 수도권 의사 활용해 수준 제고
- 지방 공교육 파격적 지원 확대와 차별화
- 문화 수준 향상 노력으로 청년층에 어필해야 함.
- 직장·학교·관공서·병원·시장 등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접근

- 이민자-다문화 포용 문화
- 도농 1인 2주민등록제 & 농촌 주택 보유는 1가구 2주택 제외(현재 상
속시 1가구 2주택 적용)
- 드론, UAM, 자율주행차 등 발전

강연자료 / 부록



지방도시 및 인구문제의 당위와 현실

전상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사회학)

1



패러다임 전환

- ‘거룩한’ 고정관념과 ‘상투적’ 대책
- 지성적 후퇴전(우치다 다쓰루)
- 부족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상상력(조영태)

2



역대 지방·인구정책의 성적과 평가

- 저출산 대응 및 지방화 관련 천문학적 예산 투입

vs. OECD 최저출산율,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

- 제 2 수도권, 남방한계선, 오송-세종 17km, '노인과 바다'
- '그나마 선방' vs. '참담한 실패'



인구·지방문제의 재인식

- 지방의 재인식

- '지방' 개념의 역사성, 상대성
- 신 노마드사회(자크 아탈리), 모빌리티 전환(존 어리),
상시접속사회(브라이언 첸)
- 전국의 공간적 균질화, 지방의 비장소화, 제자리 실향민



인구·지방문제의 재인식

□ 인구의 재인식

- 인구의 '정치적 발명'(미셸 푸코)
-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정치적 경계(베네딕트 앤더슨)



인구·지방문제의 재인식

□ 인구문제와 공간문제의 '통합적' 접근

- '규모의 경제' 및 '스케일 법칙'(제프리 웨스트)
- 정주인구에서 유동인구로
- '생활인구', '관계인구', '방문자 경제'



인구감소 시대 지방의 생존·발전 전략

1. 정치권 배제

- 지방자치의 '政맥경화'
- 人口인가 人質인가?
- 도시계획가, 건축가는 '그들만의 지방자치' 동업자?(구마 겐고)



인구감소 시대 지방의 생존·발전 전략

2. 다양성·차별화 경쟁

- 할당과 안배, 1/n주의의 극복
- '발로 뛰는 투표'의 의미 회생(티부 가설)



인구감소 시대 지방의 생존·발전 전략

3. 세계화 + 지방화

- 제로섬 게임에서 비제로섬 게임으로
- 지방자치의 국경 넘기
- ‘모든 사람을 남으로 볼 때 온 세계가 고향이 된다’(아베 긴야)
- 세계화 시대에 국가가 사는 법
 - ‘다양한 지역들의 ‘거대한 相異 공동체’ (엔리코 모레티)



禍福同門(화복동문)

禍福同門

2022 환경대학원 · 건축공간연구원 합동 심포지움

인구감소시대, 지방도시의 생존을 말하다

발 행 | 2022년 11월 09일

저 자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건축공간연구원

펴낸이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건축공간연구원

펴낸곳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82동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전 화 | 02-880-5641

기 관 | <https://gses.snu.ac.kr/>

<https://www.auri.re.kr/>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건축공간연구원 2022

본 책은 저작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